

#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98
----------	------

제출연월일 : 2024. 11.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202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불부합하게 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 연장(안 제2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삭제(안 제3조)  
다.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안 제4조)  
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안 제6조)  
마.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7조)

## 3. 개정조례안: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4. 9. 23.~2024. 10. 14.(21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 **9. 참고사항: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경기도 세정과**

하남시 조례 제 호

##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자동이체” 를 “자동납부” 로, “500원” 을 “800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이체” 를 “자동납부” 로, “1천  
 원” 을 “1천600원”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세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세정과장 나 회 숙
	팀장 직위 · 성명	재산세팀장 모 덕 용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모 덕 용 (031-790-5119)

##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  
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  
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  
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동차로서·취득세 또는 「지방  
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  
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  
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  
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  
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1. · 2. (생 략)

② ~ ④ (생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략)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그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논·밭·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

-----문  
화유산-----

-----2  
027년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 2. (생략)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액공제 순위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  
-----  
-----  
-----  
-----  
-----  
----- 2027년 12월 31일-----.  
-----  
-----  
-----.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만을 신청하거나 <u>자동이체</u> 방 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u>자동이체</u>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 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천 원</u></p>	<p>1. ----- -----<u>자동납부</u>----- ----- ----- <u>800원</u></p> <p>2. -----<u>자동납부</u>----- ----- ----- <u>1천600원</u></p>
--	---

## 관계법령 발췌서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2021. 12. 28.>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학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학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삭제<2018. 12. 24.>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29.>

1. 삭제<2023. 12. 29.>

2. 삭제<2021. 12. 28.>

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 9. 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1. 23.>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⑦ ~ ⑬ “생략”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 9. 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시설물 또는 구역을 보호물 또는 보



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15조(보호물·보호구역)**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